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1994. 12.

徐 載 鎮(北韓研究室長)

金 炳 魯(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目次

I. 序論	1
II. 北韓體制的 部門別 現況	3
1. 國際環境의 變化: 周邊國의 영향력 증대	3
2. 經濟沈滯의 深化: 構造的 非效率性 증대	8
3. 社會構造의 變化: 非公式 構造의 성장	14
4. 住民意識의 變化: 個人主義 및 物質主義의 확산	19
5. 權力基盤의 變化: 주민들의 支持基盤 미약	26
III. 金正日의 情勢認識	32
1. 社會主義 體制守護에 대한 위기의식	32
2. 開放의 필요성 및 부작용	39
3. 南北 體制共存 지향	43
IV. 金正日 政權의 變化展望	47
1. 政策展望	47
가. 對內政策: 唯一體系의 지속과 經濟特區의 확대	48
나. 對外政策: 北·美, 北·日 국교정상화	53
다. 對南政策: 經協擴大 및 形式的 南北對話 재개	59
2. 金正日 政策의 評價와 時期別 政權變化의 展望	62
가. 短期的 展望	62
나. 中·長期的 展望	66
V. 結 論	71

I. 序 論

해방 이후 49년 동안 북한을 통치해 온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 정권의 출범이 임박한 시점에서 최대의 관심은 김정일 정권이 향후 얼마나 오래 지탱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의 등장이 김일성 시대의 終焉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김일성시대의 延長일 것인지, 또 아니면 김정일 이후의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기 위한 過渡期에 불과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일성의 장기집권이 결국은 국제적 고립, 경제위기, 주민들의 사상동요 등 총체적 위기로 막을 내렸다는 점에서 후임자 김정일의 장래는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 김정일이 20년 동안 후계준비를 해왔다고 하지만 후계자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의 受惠者라기 보다는 전임 장기집권자의 被害者가 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 정권 50여 년 동안 체제유지를 위한 폐쇄주의, 개인숭배, 역사왜곡, 경제비효율성, 부정부패 등의 온갖 문제점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현안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내외적 개혁·개방이 불가피해졌다.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구시대의 폐쇄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기존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거나 급격한 개혁·개방을 경험한데 반하여 북한이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특이한 정권유지 전략의 하나로 대외적으로 閉鎖主義를 고수하여 격동하는 사회주의

권의 바람을 차단하고 외부변화의 물결을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정책방향을 고수하거나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면 김정일 정권은 스스로를 過渡政權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현실은 김일성 시대의 否定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개혁·개방하느냐 하는 것이 김정일의 당면한 고민거리이다.

한국전쟁 이후 40여 년 동안 적대관계에 있었고 핵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지속했던 북한과 미국은 일련의 고위급회담을 통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2년동안 끌어왔던 핵문제를 매듭짓고 대화와 타협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북미간 核協商이 타결됨으로써 북한은 연락사무소 개설, 경수로 지원 및 대체에너지 공급 등 핵문제 완결을 위한 굵직한 현안들을 앞에 두고 있으며 북미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매듭짓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북대화를 통한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정일은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체제를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김정일 정권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본 연구는 社會主義圈 崩壞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는 북한체제의 분야별 현황을 점검하고, 김정일의 대내외 정세인식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김정일 정권의 정책방향을 전망하며, 그 정책방향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하여 김정일 정권의 변화방향을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어 예측해 보고자 한다.

II.北韓體制的 部門別 現況

1. 國際環境의 變化: 周邊國의 영향력 증대

북한체제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自力更生路線을 고수하던 북한은 이제 그만큼 증대된 외부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北韓의 國際社會 再編入 희망

무엇보다도 북한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재편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하여 자본주의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던 북한은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권으로編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던져졌다. 특히 과거의 우방이었던 소련, 중국, 동구제국들이 남한과 수교를 하게 되자 북한은 경제적·외교적 고립감과 동시에 군사적 위기의식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식민통치의 主犯으로 적대시해 온 일본과 식민지배상문제 및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시작하였다. 1990년 9월 28일 북한 노동당과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의 3당간에 「조일관계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북한과 일본은 1991년 1월말 평양에서 제1차 회담(1991.1.30~31)을 시작하여 1992년 11월 핵문제로 중단되기까지 8차례의 회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북한은 대남정책에서 급속한 선회를 시도하였다. 1989년 2월 28일

~1990년 7월26일 사이에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 문제를 협의할 것에 합의한 이후 1990년 9월~1992년 9월까지 8차의 고위급회담을 지속하면서 남북간에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까지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이 「남북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배경은 「불가침조약」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1990.9.4~7)에서 ‘하나의 조선’ 정책을 내세워 상호체제인정 및 교류·협력을 반대하였던 북한은 1990년 12월(11~14일)의 3차고위급회담에서 「불가침선언」 채택을 강경하게 주장하였으며¹⁾ 「기본합의서」 채택·발표를 통해 南北共存을 모색했던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남한에 대해 1991년 5월 3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서 남북한 정부가 각각 외교와 군사권을 관할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일부를 수용하는 柔軟性도 보였다.

한편, 북한은 1991년 1월의 걸프전에서 보여준 미국의 실제적인 對이라크 군사공격과, 그해 4월 북한 核施設에 대한 미국의 ‘예방폭격론’이 「120일 시나리오」로 구체화된 사실이 드러나자 전쟁발발을 실제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대외정책의 전환을 서둘러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의 하나가 바로 유엔 가입이다.²⁾ 북한은

1) 통일원, 「통일백서 1992」, (서울: 통일원, 1992), p. 151.

2) 북한은 유엔가입에 대해 연방제통일이 실현된 다음 단일국호로 가입하거나 통일이전에 하나의 議席으로 가입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1991년 2월 27일만해도 북한 외교부의 비망록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5월 27일에는 이를 완전히 번복하고 “일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써 同時加入을 시도한다고 외교부가 발표하였다.

그동안 고수해 왔던 '하나의 조선정책'을 사실상 拋棄하고 독립의식으로 UN에 가입하였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 1990년 5월 24일 소위 '단계적 군축안'을 제시한 북한은 1991년 4월 단계적 철수의 첫단계 조치가 시작되는 시점을 미군철수로 간주하겠다고 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대외·대남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동기는 북한이 걸프전쟁에서 크게 두 가지 사실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는, 미 군사력이 이라크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대단한 威力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둘째는 사담후세인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협력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이러한 위력을 가진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걸프전 당시 전쟁을 불사할 만큼 매우 강경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對美·對南接近에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전환과 대외관계 개선의 의지는 핵개발의 문제가 돌출됨으로써 이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가 최근야 미국과의 협상에 성공하였다. 북한은 核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1월 22일 미국과 고위급접촉을 시작하였으며, NPT탈퇴(1993.3.12) 이후 북미고위급 1,2단계회담(1993.6-7), IAEA탈퇴(1994.6.13)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논의(1994.6.15) 등 1년 7개월을 끌어오던 타협과 강경노선은 북한의 핵동결 제시(1994.6.17)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게 되었다. 그 결과 1994년 8월 5일 북미고위급 3단계 1차회담을 시작하여 4개항의 합의(1994.8.13)를 도출하였고, 후속 전문가회담과 3단계 2차회담(1994.10.21)을 재개, 「북미 기본합의문」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제네바 北美 합의에 의하여 북한은 이제 조만간 미국과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수준의 관계발전을 하게 되었다. 머지 않아서 일본과의 수교협상도 재개될 전망이다.

나. 周邊國家의 북한에 대한 관심증대

북한을 외부 변수의 영향에 놓이게 하는 두번째 요인은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관련국가들이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관계발전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제네바 북미합의문에서 북한과 관계개선을 합의하게 된 표면적인 배경은 북한이 핵개발 동결에 대한 대가로 북미 관계개선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미국이 탈냉전 이후 동북아 신국제질서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과 관계개선을 함으로써 중국의 북한에 대한 독점권을 파괴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며, 일본의 북한에 대한 先占을 저지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역내의 냉전 구도를 해체하여 경제중심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소련의 해체로 힘의 균형이 깨진 동북아에서 대북 영향력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對西方 立地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한간,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대립을 최소화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유도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중국의 仲裁力量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즉 중국은 자

신들의 역할에 대한 남한, 미국, IAEA 등의 기대를 십분 활용하여 북한 핵문제 이외의 다른 사안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김일성 사망시 가장 먼저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 북한이 김정일이 이끄는 노동당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1994년 6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선언에 대해서도 “IAEA의 대북제재가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하고 北美會談을 중심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을 두둔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94년 10월말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함으로써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체제를 간접적으로 지원하였으며, 94년 11월 4일 남한방문에서 李鵬 총리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를 촉구하였다.

북한으로서도 중국은 상당기간 동안 식량과 에너지 등 북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우방국이며, 외교안보적 차원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血盟關係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중국을 북한의 대서방국 관계개선의 지지세력으로서 활용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주변 4強 중에서 가장 먼저 북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국가이다. 1990년 9월의 3당공동선언 이후 1992년 11월까지 제8차에 걸쳐서 수교회담을 추진한 바 있다. 일본에게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에 이르는 橋頭堡로서 대단히 중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세계적 분단구조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탈냉전의 조류를 타고 북한과 수교를 시도한 바 있으나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拋棄한 셈이다.

남한은 북한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남한의 대북접근은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기업인이 주도하는 경제적 동기도 적지 않다.

냉전 이후 수년을 끌어온 북한과 미국의 양국관계는 94년 10월 21일 발표된 「기본합의문」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적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와 동시에 일본, 남한의 대북 접근은 加速化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 중국, 일본, 남한의 대북 영향력이 증대되면 북한은 더이상 폐쇄된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북한은 그만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外的 變數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 經濟沈滯의 深化: 構造的 非效率性 증대

가. 사회주의 경제 토대의 瓦解

북한은 1950년대까지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초기 단계와 마찬가지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나, 1960년대들어 사회주의 계획 경제·통제경제의 비효율성이 深化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의 80% 이상을 중공업에 할당해 왔고 전시경제체제의 구축 등으로 경제가 극도로 沈滯되었다. 그 결과 기본소

비재와 생필품의 절대부족현상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 부족, 무역구조의 폐쇄성 및 동기유발의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북한은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등의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1970년대에는 의자도입정책³⁾ 및 「3대혁명」운동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였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정책지도부는 1984년 1월 강성산을 총리로 기용하고 制限的 改革·開放⁴⁾을 시도하였다. 이는 중공업위주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공업 및 생활소비품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도적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경공업혁명」을 기치로 내걸고 대내적으로 1984년 8월 '8.3인민소비품 증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터발과 「장마당」을 활성화하는 등 주민 개개인에게 물질적 인센티브를 附與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의 구역과 읍, 농촌의 군단위에 각각 1개씩 200여 개 이상의 「직매점」이 설치되었고, 해마다 이를 위한 공장과 작업반이 1천 5백여 이상씩 늘어났다.⁵⁾ 또한 국영기업소에서의 독립채

3) 이 政策은 중동오일쇼크, 가뭄, 무역구조의 폐쇄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北韓은 1976년부터 유럽국가들로부터 支拂停止(default) 선고를 받고 채무불이행 국가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4) 改革이란 경제부문에서 국가중심적이고 불균형적인 構造의 개선을 의미한다. 즉 국가통제의 경제영역을 해제하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소위 '자본주의적' 요소 도입을 制度化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開放은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통제, 자본주의권과의 무역교류 기피 등의 폐쇄성에서 벗어나 정보접촉의 자유를 허용하고 자본주의 국가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改革·開放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자유허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유화'의 과정으로 부를 수도 있다.

5) H. S. Lee, "North Korea's Closed Economy: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Vol. 28, No. 12 (December 1988), p. 1268;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1」, p. 176.

산제를 확대·실시할 것을 결정⁶⁾하고 이듬해 추진한 연합기업소에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외채의 위험부담 없이 동구 사회주의권과 서방권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합영법을 채택하는 등 대내외적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1984년 1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의 대외개방 정책노선을 결정하고 대외경제협력 대상으로 사회주의 제국과 제3세계 이외에 북한에 우호적인 서구자본주의 국가와 경제교류를 增進할 것을 결정하였다.⁷⁾ 1984년 9월에는 합영법을 제정하였고, 1985년과 1986년에 합영법의 시행세칙이 마련되었으며, 1986년 8월에는 합영총국이, 1988년 11월에는 합영공업부(1990년 폐지)가 각각 설치되었다.

나. 經濟難 深化

현재 김정일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경제난 해결을 통해 체제를 鞏固化하고 김정일 정권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경제는 1990년 이래 마이너스 성장⁸⁾을 계속하였으며

6) 1984년 黨에서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이 수정되었으며 이를 全산업부문에 확대·실시하는 지침을 김일성이 하달하였다. 김일성,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정무원 상무회의에서 한 연설, 1984.11.13),” 「김일성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346~62.

7) 「로동신문」, 1984.1.27; 김일성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38」, pp. 214~231; 1984년 6월과 7월 김일성의 소련과 동유럽 국가 방문후 무역확대의 필요성이 재확인되었다. 「로동신문」, 1984.7.10.

8) 1990년 -3.7%, 1991년 -5.2%, 1992년 -7.6%, 1993년 -4.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1991년에는 사회주의권 붕괴의 영향으로 북한의 수출과 수입 등 대외무역이 전반적으로 크게 萎縮되었다. 북한은 1991년부터 원유, 석탄 및 식량 수입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특히 1991년 1월부터 북한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던 소련이 지금까지의 求償貿易을 거부하고 경화결제를 요구함으로써 원유수입이 10분의 1로 격감⁹⁾되었고 1993년에는 1990년에 비해 5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¹⁰⁾ 대외교역은 1990년에 비해 1993년에는 53% 수준으로 縮小되었으며 외채규모도 1990년의 78.6억 달러에서 1993년에는 약 30%가 증가한 103.2억 달러로 늘어났다.

합영사업도 부진하여 합영법 시행 이후 1992년 7월까지 외국기업과 140여 件의 북한내 합영회사 설립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조업중인 66건 중에는 일본(조총련기업)과의 합영이 5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¹¹⁾ 총투자액도 1억 달러 정도로 규모가 매우 작다. '8.3인민소비품 증산운동'도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올렸을 뿐, 원료조달의 한계와 정부의 가격통제, 더욱이 餘暇利用의 제한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소위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한 근본적인 개혁이라기 보다는 부족한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한 대중동원의 한 手段에 머물러 있다. 독립채산제 역시 효

9) Chong-Sik Lee, "Prospect for Nor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co-hos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May 27~28, 1994, Seoul, Korea), p. 7, 8, 10.

10)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1994.8.17), p. 8; 이른바 '선행부문'의 발전이 시급함은 그후 여러 곳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채취공업과 전력산업의 沈滯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장종록, "선행부문의 빠른 발전을 밝혀준 강령적 지침," 「경제연구」, 1991년 제1호, p. 3; 「로동신문」, 1992.5.16.

11) 「한겨레신문」, 1992.10.3.

을성提高라는 원래의 목표와는 달리 낭비현상을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轉落하였다.¹²⁾ 터밭과 농민시장 활성화의 경우 곡물류와 공산품에 대해서는 거래를 금지하고 채소류와 가내수공업제품으로 한정되어 있고 가격도 제한되어 있어서 불법거래 및 암거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북한은 생활에 대한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1992년 3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단행하였다.¹³⁾ 최근들어 전력 및 석탄생산등 광공업이 부진하였고 석유수입도 감소하여 경제가 전반적으로 沈滯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대폭적인 임금인상조치를 취하고 주택과 같은 비생산적인 건설부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불만해소가 시급한 문제로 擡頭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회적 副作用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경제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통제된 개방정책, 즉 經濟特區를 시도한 것이다. 1991년 12월 28일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¹⁴⁾로 지정하는 한편 1992년 헌법개

12)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3」 (1983), p. 459; 주용설, “기업관리의 합리화와 경영활동에 대한 과학적 분석,” 「근로자」 (1991.9), p. 70; 리경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 것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재정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방도,” 「근로자」 (1991.8), pp. 59~64.

13) 「로동신문」, 1992.2.14. 북한은 1992년 3월 1일부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평균 43.4%정도 인상하였으며 연금은 평균 50.7%, 학생들의 장학금은 33%를 인상하였다. 농산물의 정부수매가격도 비 26.2%, 강냉이 44.8% 등 전반적인 임금인상조치를 단행하였다.

14) 계획의 주요 내용은 나진, 선봉, 청진등의 도시에 항만시설을 확장하고 중국과 소련을 잇는 기존철도망과 도로를 정비·보완하며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동북아 경제협력과 輸送의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나진·선봉지대 및 청진항 개발을 위한 총투자규모는 69억 8,900만 달러로 사회간접자본부문과 공업부문에 절반 정도씩 투자될 예정이다. 합영뿐만 아니라 100% 단독 외국출자 기업을 허용하고 창립 3년 후부터 지불하는 소득세율도 기존의 25%에서

정(37조개정, 1992.4.9), 외국인기업법·투자법·합작법(1992.10.5), 합영법 시행세칙 개정(1992.10.16) 등을 마련하였다. 1993년부터는 1992년 12월 총리에 오른 강성산¹⁵⁾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세금법·외화관리법·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1.31), 토지임대법(1993.10.27), 외국인투자은행법·출입국관리규정(1993.12.10), 합영법전문개정(1994.1.20), 외국인기업상주대표부규정·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1994.2), 자유무역항규정(1994.4.28),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1994.5) 등 대외개방과 관련된 각종 법규의 細則을 제정하였다.

이같은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1993년 12월 당 제6기 21차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6차회의 및 199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 과업으로 결정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의 실현이 매우 시급한 경제과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관계 지도자들은 식량부족을 때꾸기 위해 농업생산을 증대시켜야 하고 경공업과 전자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권과의 교역을 확대해야 하며¹⁶⁾ 폐쇄적인 무역구조로 겪는 만성적인 외화부족 현상을 타파하고 수출을 늘려 대외지불능력¹⁷⁾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진·선봉지대를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15%로 인하하여 외국자본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

15) 이는 1984년 합영법 및 신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강성산을 등용시킨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16) 한수길,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절실한 요구,” 「근로자」(1991.4), p. 71.

17) 김달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1989.2), p. 61.

북한은 식량난·에너지난의 지속, 생필품부족의 蔓延,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외채증가 및 무역의 악화상태 지속 등과 같은 전반적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체제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심각해져가는 경제난 해결을 위하여 특구활성화 및 농업·경공업·무역발전 등 3대제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내부결속과 정권안정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3. 社會構造의 變化: 非公式 構造의 성장¹⁸⁾

북한의 지도부가 의도하지 않는 체제변화의 하나는 사회구조변화이다. 사회주의 공업화와 관료주의화가惹起시킨 필연적인 현상은 社會構造의 分化이다. 사회구조의 분화는 두 가지 수준에서 일어난다. 첫째는 직업과 관련된 분화이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공업화가 직업구조를 분화시키는 효과이다. 1946년말 현재 74.1%가 농부이었던 것이 勞動者, 事務員, 販賣員, 技術者 등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직업분화와 병행하는 것은 각 직업의 기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해서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이다. 공업화와 더불어 도시화도 진전된다. 社會分化의 두번째 水準은 職業分化, 都市化, 教育水準의 向上으로 職位集團(status group)이라 불리는 사회관계의 분화이다. 예를 들면, 교육기관을 통해서 개인들은 각급 학교의 동기 동창 그룹으로 분화되어진다. 또 도시화의 진전으로 같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같은 고향

18) 民族統一研究院,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pp. 391~408에서 수정·보완.

을 가진 동향집단이 발전하게 되며, 같은 직장에 종사하는 職場同僚, 留學同僚 등의 다원화된 사회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가. 階級構造의 分化

북한의 사회구조 변화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인테리계급으로 불리는 新中間階級の 성장이다. 신중간계급의 비율은 1946년말 6.2%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에 약 17%에 이르게 될 정도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중간계급 또는 근로인테리는 量的으로 팽창했을 뿐만 아니라 質的으로도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 그들의 일부는 사회적 상승이동을 하여 전문관료집단으로 浮上하였으며 혁명엘리트와 과도기적 연합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가, 지주 등 '착취계급'은 청산되었지만 산업화의 결과로 근로인테리라고 불리는 새로운 신중간계급이 성장함으로써 북한은 이론적, 정책적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이 모순이 동구 및 소련에서는 공산체제를 붕괴시켰고 중국에서는 천안문사태를 야기시켰다. 북한 인테리들의 사회비판기능과 여론주도 역할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서도 변화의 요인은 증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테리들은 실제로 體制批判과 動搖勢力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북한 지도부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부르조아 사상의 영향도 비교적 많이 받은 오랜 인테리는 물론,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자란 새 인테

리들도 생산활동과 떨어져 주로 개별적으로 정신활동을 하는 직업상 특성으로 하여 혁명적 단련이 부족하며 사상수양에 힘쓰지 않으면 개인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여러가지 불건전한 사상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¹⁹⁾

최근의 동구와 소련에서의 개혁이 新中間階級 또는 인테리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 북한의 지도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인테리들을 노동계급의 진정한 인테리로, 참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일단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섰던 사람들도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반동적 사상공세 앞에서 사상적으로 무장해제되고 변질되어 사회주의의 길을 포기하고 치욕스러운 반혁명의 길로 굴러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²⁰⁾

북한에서 변화의 요구를 주도할 세력은 전문관료출신의 고위 간부들 중 일부, 젊은 엘리트층, 소환유학생들, 외교관 그룹, 北送僑胞 등이다. 북한에서는 현재 위로는 외교관 및 체제불만 중견간부 등을 중심으로, 아래에서는 召還留學生 및 인테리층을 중심으로 체제비판 분위기가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 「근로자」 (1980.8), p. 20.

20) 위의 책, p. 21.

나. 都市化 및 教育水準의 증가

1987년 현재 북한 총인구 중 약 60%의 인구가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또 首位都市比率이 높아 1980~1987년간 평양은 전체도시 인구의 34.4%에서 30.7%로 약간 감소했지만 그 비중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남한의 1990년 현재 32.8%보다 약간 낮은 편이다. 이렇게 都市化가 진전되면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의 패턴이 달라져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 퍼지는 '유비통신'이 발달할 수 있다. 유비통신은 공식적인 통신에 비해 같은 얘기라도 과장되어 소문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시화의 진전은 情報統制에도 불구하고 批判意識이 전파될 가능성을 높인다. 대부분의 사회운동이 도시에서 일어난 것은 이러한 정보소통과 상호작용의 도시화 조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北韓社會 工業化와 관련된 또 다른 사회변화는 교육수준의 급증이다. 1972년부터 전반적인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를 발전시키면서 1977년부터 고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77년 9월 5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이후 교육투자를 더욱 강화하여 해마다 대학과 전문학교를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1987년 한해에 10개 대학, 3개 전문대학이 신설되었다. 이로써 大學은 1987년말 현재 244개이며 大學과 專門大學에서 49만4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1990년 현재 146만의 大學卒業者가 있다.²¹⁾ 北韓의 학력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²²⁾

21) 「조선중앙연감」 (1988).

22)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Washington D. C.: Center for Int'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1990).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체제유지 지향적일 수도 있지만 北韓體制가 南韓體制보다 열등하다는 정보가 일단 유입되면 그것에 대해 비판적이고 독자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自由化의 傾向은 높아지는 것이다. 한 귀순유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北韓에서도 대학생 정도면 생각은 한다”는 것이다. 또 학력수준의 상승으로 기대수준이 상승하면 政治的 正當性의 기준도 달라지는 것이다. 해방직후 토지개혁으로 토지가 분배되었을 때에는 소작인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 만족했지만 현재의 고학력자에게는 만족의 수준이 다를 것이다. 北韓에서 청년세대의 혁명성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단지 혁명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北韓의 젊은 세대는 高等教育을 받고 理性的으로 보다 覺醒된 세대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 世代構成의 변화

북한사회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78.5%에 달한다. 또한 북한에서 ‘혁명’이라고 말하는 항일투쟁과 한국전쟁 동안의 ‘대미투쟁’을 10세 이상의 나이로 直·間接 체험한 사람은 전체인구의 12% 미만이다. 북한 사회체제 유지에 가장 위협적인 문제의 하나는 ‘지주와 자본가와 제국주의자들의 악독함’을 모르는 戰後世代들의 정치·사회적 진출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동구와 소련 사태 이후 대대적인 思想敎養의 주된 대상이 청년층이라는 사실이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해준다.

이렇게 사회구조가 분화되면 이전과 같은 획일적이고 일사불란한 국가통제가 弛緩되기 마련이다. 각종의 비공식집단이나 소집단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사회의 독자적인 여론형성구조를 낳게 되고 국가의 공식적인 선전은 이를 통해 여과되어 사회에 전달됨으로써 黨과 國家의 이데올로기적인 헤게모니가 부식되는 것이다.²³⁾ 소련에서 KGB와 경찰이 현대적 대도시의 수백만 인구들 속에서 감시와 감독의 수준을 예전같이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범죄율의 지속적인 증가, 아프리카니스탄 사태발생시 유례없는 징집회피 사례의 증가 등을 실례로 들고 있다. 북한에서도 사회분화의 진전으로 비공식집단이나 소집단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의 공식적인 선전은 이를 통해 여과되어 사회에 전달됨으로써 黨과 國家의 이데올로기적인 헤게모니도 腐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 住民意識의 變化: 個人主義 및 物質主義의 확산

가. 혁명열기의 消盡²⁴⁾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수립 이후 지금까지 '혁명'을 사회동원의 핵심적 메카니즘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북한의 체제유지는 지속적인 혁명의 열의, 혁명의 불꽃을 지킬 수 있을 때 가능

23) Starr S. Frederick, "Soviet Union: A civil society," *Foreign Policy*, Vol. 70 (1988) 참조.

24) 民族統一研究院,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pp. 396~97에서 수정·보완.

하다. 즉 혁명의 불꽃이 꺼지면 무너져버릴 수 있는, 유토피아적인 이념에 의해서 체제가 지탱되는 動員社會(campaign society)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제1세대 혁명엘리트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북한사회에서 ‘혁명의 전통’이 지배적인 국면에 있지만 그것이 얼마동안 더 지탱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은 항일 유격대의 빨치산 혁명전통을 사회통제의 핵심적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 김일성의 표현을 빌면 “오랫동안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 이긴 항일빨치산들의 투쟁과 생활은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끝없이 감동시키며 그들을 영웅적 투쟁으로 고무하는 산 모범”으로 되고 있다. 이 빨치산 혁명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와 같이 오늘의 생활을 규정하는 혁명의 지도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항일빨치산의 전통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복원’하고 있다. 이는 복원이라기 보다는 虛構的 再創造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북한은 자기 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일투쟁의 전통을 196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활용하고 있다. 즉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따라 배우며 그것을 생산, 학습, 생활의 역할 모델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80년대 들어 항일빨치산 전통이 더욱 강력하게 동원되는 이유는 중국이나 소련, 동구 사회들이 개혁한다고 해서 북한도 개혁할 것이 아니라 ‘주체식’ 또는 ‘우리식’으로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외부의 변화의思潮가 북한 내부로 침습하여 동구나 중국 및 소련에서처럼 인민대중들이 蜂起

할 것을 우려해 이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혁명의 재창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혁명은 이미 일상화되어 혁명적인 효율성이 매우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난은 혁명열기 소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前평양주재 소련 외교관인 다비도프(Oleg Davydov)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離反'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나. 物質主義 확산

1980년대 후반 북한경제의 급속한 침체로 食糧과 生必需品 供給의 양과 질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은 부족한 생필품 확보를 국가에 기대하기 보다는 개인이 독자적으로 책임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북한주민들이 資本主義的 生計維持 방식의 확산을 선호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暗市場과 같은 사적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필품을 구입하고 동시에 이득을 올리는 직접적인 삶의 경험을 통하여 돈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價値意識이 급격히 달라졌다. 암시장이 발달되기 전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돈의 효용가치가 없었다. 이전의 북한 주민의 지배적 가치는 政治的 黨的으로 인정받아 공적 부문에서 출세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되었다. 돈이 있으면 당원이 될 수도 있고, 대학에 입학도 할 수 있고, 웬만한 문제도 뇌물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돈의 위력이 강해졌다. 북한주민은 이제 黨

員이 되는 것보다는 돈버는 것을 선호한다고 한다.²⁵⁾

돈의 가치를 모르던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알게되자, 그리고 돈의 效用性이 높아지자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²⁶⁾ 북한의 주민들이 노동조건이 나쁘기로 소문난 시베리아 벌목장에 돈을 벌기 위하여 몰려드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벌목노동자 선발은 매년 각 시, 군 당에서 공장, 기업소에 폰드(모집정원)를 내려보내어 모집하는데 1년에 3천명 정도 선발되며, 1개군(현재 147개군) 단위에서 20명 정도씩 선발하고 있는데 지원자 경쟁율이 평균 50:1 정도로 치열하다. 1985년 김정일이 평양시 주민생활을 높이는 방안으로 재소 입업 노동에 평양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파견하라는 정책지시가 하달된 이후 평양시 주민들이 전체 벌목공의 30~40%를 차지한다고 한다.²⁷⁾

암시장, 밀수, 물물교환 등의 私的 상업행위가 확산되면서 자본주의적 이윤을 목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에는 80년대들어 각 기관, 기업소의 외화벌이가 강화되면서 노동자, 농민, 안전원, 보위원 등 신분에 관계없이 각 계층에 거간꾼이 발생하여 평양의 호텔, 식당 등에서 외국인, 외국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거간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물질주의적 가치의식은 생산수단이 국유화, 또는 집단화되어 있는 북한에서 個人所有主義를 확산시키고 있다. 중국이 개방과 동시에 급속히 산업화되면서, 중국을 통하여 중국산 의류, 일본 및 남한제 가전

25) 귀순자 고청송(1993.6. 귀순)의 증언.

26) 귀순자 이정희의 증언; 김군태 편, 「안정없는 군대이야기: 공개되지 않은 인민군 쫓병생활」(서울: 의암출판사, 1993), p. 247.

27) 귀순자 장기홍(1991.9. 귀순)의 증언.

제품이 스며들어 북한주민들의 소유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각 부처 및 기업소에서 운영하는 무역회사들(현재 260여 개로 추정)이 밀무역으로 들여온 가전제품, 생활용품들은 주민들을 더이상 주체사상의 이념에 묶어놓기 어려울 정도로 물질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시베리아 벌목노동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김없이 가져오는 컬러 텔레비전, 냉장고, 재봉틀, 운동복 등은 북한주민들에게 소비품의 소유욕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소비물자에 대한 요구증대는 식량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다. 社會逸脫現象 증가

돈에 대한 높은 효용가치와 소유주의, 물질주의가 발달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들면서 뇌물은 사회전체에 만연하는 일탈행위로 되었다. 고위관리에서부터 일반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뇌물 수수는 日常化되어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자가 뇌물을 받는 행위는 공직의 권한을 활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챙기는 행위이다. 대체로 권력이 집중된 사회일수록 권력자에 대한 뇌물이 더 성행하는 법이다.

귀순자 강철환의 증언에 의하면 1970년대 후반에는 뇌물이란 구경도 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뇌물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고 한다. 강철환의 가족은 수용소에서 10년 동안 갇혀있다가 친척의 뇌물로 풀려났으며, 처음에는 농장에 배치받았다가 뇌물을 제공한 후 다시 우마차 사업소로

배치받았다고 한다.²⁸⁾

러시아 별목공 선발과정에서도 어김없이 뇌물이 수수되고 있다. 별목공 선발은 각 공장 기업소에서 金父子에게 충실하며 사업과 당조직 생활, 사로청 조직생활에서 모범이며 맡겨진 생산과제 수행에 모범을 보인 당원들과 사로청원들을 黨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절차 가운데 면접시험을 치를 때는 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은근히 요구하는 것이 예사이며 뇌물을 제공한 사람만 합격된다고 한다.²⁹⁾ 중국사회과학원의 한 조선족 사회과학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1988년 북한의 친척을 방문할 때 평양에서 함흥행 기차를 탔는데, 역무원들이 친척에게 줄 선물보따리를 보고는 뇌물을 요구하여 선물보따리에서 물건을 하나씩 꺼내어 주고서야 비로소 기차에 짐을 실을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에서 식량과 생필품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난 사회일탈 현상의 하나는 줌도둑의 盛行이다. 고위직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퇴근시에 직장의 자산이나 생산품을 한두개씩 훔쳐 들고 퇴근한다는 것이다. 직장 줌도둑도 공적인 직장의 자산이나 생산물을 불법으로 私의 所有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앞의 뇌물과 마찬가지로 독직죄의 일종이다. 직장 줌도둑도 연령, 성별, 학력 고하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사회주의적’ 일탈행위이다. 이같은 일탈행위는 고위직일수록 回數와 量이 더 많다고 한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안전부 사람들은 안전하게 뽑아먹고, 보위부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뽑아먹

28)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3: 그리운 어머니」 (서울: 향실, 1993), p. 46.

29) 채학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연합통신, 1994), p. 240.

고, 당간부는 당당하게 뽑아먹는다는 은어도 유행한다고 한다.³⁰⁾

절도도 매우 성행하고 있다. 귀순자 강철환의 증언에 의하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보면 기차안의 여기저기서 도둑맞은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차안에서 깜빡졸거나 굴속을 한번 지나고나면 짐이 없어지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³¹⁾ 귀순자 어승일의 증언에 의하면 트럭 운전수들이 차량의 부품을 도둑맞을가봐 밤새 차안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밝혀진 것은 집단주의적 가치가 지배적인 가치로 되어있는 북한에서 이제 집단주의적 충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슬로건과 사상교양은 설득력이 미약해지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질주의, 소유주의, 배금주의에 기초한 個人主義가 지배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가치의식이 이렇게 물질주의로 변화한다면 사회주의 혁명의식을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울 것이다. 최근들어 북한에서 사상교양과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의식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게 된 요인도 경제침체가 지속되자 사회주의 이념을 대신하는 자유주의, 물질주의를 지향하는 가치의식이 발달한데 기인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경제침체와 주민의 가치변화는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30) 북한방문 前조총련계 출신 경제학 교수 이영화 증언; 윤웅(1993.10.11 귀순)의 증언.

31)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3: 그리운 어머니」, pp. 61~62.

5. 權力基盤의 變化: 주민들의 支持基盤 미약

가. 權力承繼를 위한 制度的 준비

김정일은 1973년부터 20년 동안 권력승계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즉 黨중심의 일원적 정치구조에서 김정일은 당 비서국과 조직지도부를 통해 당원을 장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무원과 군을 장악하면서, 黨·政·軍의 공식적 직위를 단계적으로 맡아 왔다. 1973년 9월 당비서, 1974년 2월 당정치국 위원으로 임명된 김정일은 당을 공간으로, 그리고 3대 혁명소조³²⁾의 인맥을 중심으로 권력의 실제적 기반을 구축해 온 것이다. 그 결과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은 당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명실공히 권력승계자로 浮上하였다. 1980년 이후 김정일은 1982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에 진출하였고 이때부터 김정일은 對주민 정치적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파급시키기 위한 語錄出版과 사상체계 정비 및 사회 각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김정일 수령승계를 염두에 두고 1987년 말부터 김정일의 이미지를 刻印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항일 '구호나무'의 발굴 등을 통해 본격적인 김정일 偶像化作業을 추진하여 '자주시대의 세련된 영도자',

32) 1973년 발족된 3대혁명소조는 전체인원이 약 4만~8만 정도이며 현재까지 배출된 소조원들은 약 20여 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은 김정일 정권의 중요한 지지세력이 되고 있다. Pan Suk Kim, "Prospects for Change in the Power Structure in North Korea," *Korea Observer*, Vol. 42, No. 3, p. 306.

‘광폭정치가’, ‘인덕정치가’라는 이미지를 각색하였고, 이론적으로도 ‘사회적치적 생명체론’과 함께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 등을 내세워 내부결속을 다지고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김정일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신설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되는데 이어, 1991년 12월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고 1992년 4월에는 원수칭호를 수여받았다. 1993년 4월에는 마침내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됨으로써 일체의 무력을 총지휘·통솔하는 통치권을 확보하여 권력승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黨과 軍에 대한 統制

김정일이 권력승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黨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및 軍을 장악함으로써 권력의 인적기반을 확보하고 수령의 이미지 창출 및 대주민 선전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³³⁾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 비서가 된 이후 그의 유일지도체제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원칙」 및 ‘총화제도’의 실시를 강화함으로써 일반인민들을 지도하는 간부들에 대한 통제를 단행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당원들

33) 全賢俊, 「金正日 리더십 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의 감시감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黨細胞를 활용하였으며 세포의 종류에 맞게 2일당생활총화, 3일당생활총화, 10일당생활총화를 실시함으로써 당원들을 엄격하고 철저히 통제하였다.

한편, 김정일은 당중앙위 군사위원회 서열 2위의 위원 및 조직지도 비서로서 軍에 대한 당적 지도 계통을 장악함과 동시에 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민군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관리 및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김정일 정권 保衛 관련 3대무력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호위총국에 대해서도 김정일은 자신이 首長職을 맡거나 당조직 지도부를 통해서 장악하고 있다.³⁴⁾

다. 住民 支持基盤의 약화

金正日이 당조직과 사회단체를 통해 사회통제 활동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의 주민 지지기반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정권에 대해 김일성과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批判意識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김일성이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던 것과는 달리 김정일은 전체주민의 40~50% 정도의 지지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³⁵⁾

金正日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경우, 金正日에 대해 나름대로 실무적이고 통솔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고, 김정일의 자유분방한 성격이나 돌출적 행동 등도 북한의 의도대로 “통이크고 대담한” 성격으로 학습되

34) 鄭永泰,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35) 金炳魯,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pp. 87~95.

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金正日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기반은 대체로 약화되고 있으며, 김일성 사후 김일성과의 비교·평가에 준하여 세 가지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金正日은 金日成과 같은 항일운동의 역사도 없으며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도대체 김정일이 조선을 위해 무슨 일을 했길래 그 사람이 나서는가”라는 말을 하곤 한다. 金正日이 지도자로 나서는 것은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이유밖에 없으며 김일성이 자기에게 충성스럽다고 믿어준 것 이외의 지도자적 장점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金正日이 등장하면서 북한경제가 침체되었으며 북한주민의 생활도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金正日이 시행한 일련의 정책, 즉 70일전투, 섬멸전,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200일전투 등을 경험하면서 주민들은 이 정책들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주체사상탑, 서해갑문 등 김일성에 충성하기 위한 象徴物들에 대한 건설을 무모하게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초래 하였다. 오히려 1960년대에는 잘 살았다고 느끼는데 비해 金正日이 등장한 이후는 주민생활이 악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金正日이 추진한 정책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셋째, 김일성에 대비한 김정일의 신체적 조건과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심리적인 문제까지 대두되어 金正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와 같은 비교·평가를 바탕으로 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비판 외에도 북한이 성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결과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군중으로 분류한 차별화 정책이 체제불만자를 양산해 내었으며,

이들은 김정일 정권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상당수가 포섭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金正日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을 서슴치 않는 대담성을 표출하기도 한다. 또한 60이 넘는 노년층에서는 金正日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리고 金正日이 1992년 군최고사령관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민들 사이에는 金正日이 軍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金正日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확산되고 있다.

김정일은 당조직과 군부를 장악함으로써 인적기반을 확대하고 수령승계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으나, 對住民 宣傳活動과 象徵造作 등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는데는 아직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 정권에 비해 모든 면에서 정당성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라. 權力基盤에 영향을 미치는 그밖의 요인

북한의 권력 엘리트는 유일체제 노선하에서 파벌형성이 철저히 억제되어 왔지만 派閥의 潛在性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권력 엘리트 구성에는 두 가지 유형의 잠재적인 파벌이 성장하고 있다. 그 하나는 혁명 엘리트와 전문기술 엘리트의 분파이며, 다른 하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친인척 엘리트와 비친인척 엘리트의 분파이다. 현재는 혁명 엘리트와 친인척 그룹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체제안정의 강점이었지만 앞으로는 상황적응에 非彈力的이어서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기술 엘리트와 비친인척 엘리트의 反感은 잠재되어 있지만, 김정일의 리더쉽이 취약해지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김정일의 건강문제에 관한 미확인 정보가 많이 있는데, 만약 김정일의 건강이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 김정일 이후를 둘러싼 파워 엘리트들간의 권력 투쟁은 위의 잠재적인 분파를 더욱 表面化시킬 가능성이 있다.

Ⅲ. 金正日의 情勢認識

1. 社會主義 體制守護에 대한 위기의식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북한사회 내부의 사회적·경제적 동향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과 정책정향은 金正日 政權의 변화전망에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다. 김정일은 최근 사회주의권 붕괴 원인에 대해 ‘제국주의의 책동’이라는 외적 요인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체제의 內在的 問題點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가. 外部的 要因: ‘미제국주의의 책동’에 대한 경계

김정일은 국제사회를 여전히 제국주의,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갈등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대해서 제국주의자들의 策動이라는 외적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정일은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질’에 대해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 근원이며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제국주의다”³⁶⁾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국주의는 오늘에 와서 국가독점 자본주의에 기초한 현대제국주의로 변모되어 그 침략적 본성과 야수성이 전례없이 강화되었으며 피압박

36)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51.

인민대중의 민족적 해방과 독립, 사회주의 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해 나서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신식민주의에 매여달리면서 보다 은폐되고 교활한 수법으로 다른 나라 인민들을 랍탈하고 예속시키기 위한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³⁷⁾

김정일은 제2차 세계대전 결과 제국주의가 크게 약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현대 제국주의의 성격을 역사적 관점에서 김일성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정일은 제국주의의 성격이 1960년대 들어 다국적 기업의 출현으로 資本의 國際化가 추진되었고 제국주의간에 결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인식한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레닌이 예견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해외상품시장을 쟁탈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임으로써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파괴적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자본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주의 국가들간에 단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게는 커다란 위협요인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오늘에 이르는 40여년 동안에 17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으나 자본주의 령강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은 한번도 없었으며 도리어 군사빨력을 통하여 자본주의 령강들의 군사적 결탁관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³⁸⁾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결탁관계가 모순을 드러내기 보다는 더욱 강화되어 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 중에서도 김정일은 美國은 제2차대전 과정에서 국내산업이 파괴되

37) 위의 글, p. 107, 112.

38) 김정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87.9.2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173.

지 않았고 연합국들에게 군수물자를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은 유일한 나라로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부상하였다고 평가한다. 김정일은 “미제국주의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자본주의 세계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 세계의 변화과정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³⁹⁾며 미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정일은 최근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기본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자의 경제·군사적 압력이 주요 원인이라는 데서 출발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및 체제단속의 차원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주장한다. 즉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한 것은 역사 발전법칙의 기본흐름에서 보면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⁴⁰⁾라고 소련·동구 사회주의 붕괴를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자위하는가 하면, 1991년 5월 5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제하의 담화에서는 “사회주의는 인류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착취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 사회로서 계급적 원수들과의 치열한 투쟁을 벌이며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것만큼 전진도상에서 일시적인 우여곡절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인류가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역사발전의 법칙이다”라고 社會主義 勝利의 필연성을 역설하였다.

39) 위의 글, p. 171.

40)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92.1.3),” 「천에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김정일은 이와 같은 사회주의 대 제국주의라는 대결적 국제관에 근거하여 국방력 강화에 대해 강한 집착력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은 이미 1964년 “사회주의 건설에서 郡의 위치와 역할”에서 경제, 특히 郡경제의 군사적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군을 거점으로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방상 견지에서 보아도 매우 중요하다...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쟁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우리는 유사시에 군안의 주민들의 생활을 군 자체의 힘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군들의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⁴¹⁾

제국주의에 대한 강박관념과 이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력 구축에 대한 집착은 1980년대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즉 인민생활을 더욱 높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전쟁준비를 완성하기 위하여”⁴²⁾라고 함으로써 경제를 군사적 관점에서 발전시킨다는 「경제-국방병진노선」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보였다.

김정일의 군사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권의 군사적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핵개발 모험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⁴³⁾ 사회주의권 붕괴는 북한체제

41)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근로자」(1985.3), p. 11. 이는 김일성의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1962.8.8),” 「김일성저작집 1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243~51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것이며, 1964년 「농촌테제」에 구체화되었다. 「김일성저작집 1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228~37.

42)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3.

를 전반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특히 체제의 土臺인 경제·군사부문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동유럽 사회주의의 쇠퇴, 고르바초프의 대북 경제·군사원조 중단 선언과 소연방 해체 등 일련의 사태들로 북한은 국제적 고립감과 군사적 위기감을 느꼈고 이로써 군사부문에서 새로운 전략의 시도가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핵개발을 시도하였으나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나. 社會主義 內部要因: 부정부패와 사상해이

김정일은 동독, 루마니아 등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현상에 대해 “이것이 단순히 외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갖고 있는 內在的 문제점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즉 관료주의가 팽배하고 지식인과 청소년들의 사상오염이 심각해지며, 그에 따른 엘리트간의 分裂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결론짓고 사상통제를 강화하였다.⁴⁴⁾ 그래서 1984년 개혁정책과 함께 1달에 한번으

43) 북한이 핵에너지를 핵무기 개발로 전용한 시기는 대체로 1989년 혹은 1990년의 어느 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Alexandre Y. Mansourov, "North Korean Decision Making Process Regarding the Nuclear Issue," paper presented at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Berkeley, California, May 1994), p. 1.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야紙가 보도(「朝鮮日報」, 1994.6.16)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野慾은 1990년 9월 韓蘇修交를 계기로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86년 가동한 5MW 원자로에서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북한은 지난 1950년대부터 40여 년간에 걸친 소련과의 원자력 기술협력, 그리고 현재 3천명의 원자력관련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민석·김태우·전병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실상과 저의,” 「통일문제 연구」 제3권 4호 (1991 겨울), pp. 131~42.

로 느슨하게 풀어 놓았던 학습활동과 생활총화를 1991년부터 1주일 단위로 다시 還元하였으며, ‘반사회주의 그루빠’를 조직하여 1993년 말까지 부정부패 척결작업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내재적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김정일은 체제의 내적 붕괴를 초래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국주의의 문화적·정신적 침략을 들고 있다. 즉 자본가들이 상품판로가 점점 막히게 되자 비인간적인 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사람들의 물질생활을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金日成이 지적하는 제국주의의 폐해란 대개 ‘약탈’, ‘이중 삼중의 착취’, ‘민족적 인종적 억압’, ‘계급적모순 침예화’ 등이었으나, 金正日은 제국주의의 非道德性에 대해 노골적인 표현으로 비난하고 있다. “자본가들이 사치와 부화방탕한 생활을 조장시키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각종 수단을 만들어냄으로써 마약중독자와 알콜중독자들, 변태적 욕망을 추구하는 타락분자들이 날을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불구자로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⁴⁵⁾

이러한 현대 제국주의의 ‘반인민성’과 ‘부패성’이 사회주의 체제붕괴의 내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김정일은 주장한다. 김정일은 제국주의의 속성을 “물질생활에서의 기형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로 요약, 규정함으로써 제국주의에 대한 시각을 전환시켰다. 이러한 김정일의 분석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중 물질적 풍요로움

44)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1992년 10월 10일 당창건 47주년 기념 논문), 로동신문, 1992.11.2.

45) 위의 글, pp. 177~80.

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정일의 이론에 따르면 제국주의 멸망의 결정적 이유는 '경제법칙의 불가피성' 때문이 아니라 '정신문화의 부패' 때문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의 정신적 침략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사상무장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주민들의 思想的 覺醒의 필요성은 한편으로 제국주의 국가 자체가 이러한 도덕적 타락성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지 않으며 '사상적으로 각성한' 노동자계급에 의한 혁명으로 멸망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강조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 자본주의 세계의 문화침투를 경계함으로써 체제결속을 도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현대 제국주의가 림종에 가까와 가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역사적 필연성입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스스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는 오직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 의해서만 멸망할 수 있습니다.⁴⁶⁾

이와 같은 김정일의 자본주의적 思想浸透에 대한 단속은 최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개방체제로의 돌입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제국주의의 문화적·정신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매우 강화되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후 처음 발표한(1994.11.1) 문건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도 사회주의의 사상적 각성 문제를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⁴⁷⁾ 자본주

46) 위의 글, pp. 180~81.

47) 「로동신문」, 1994.11.1.

의를 ‘물질지상주의’, ‘경제만능주의’로 규정하면서 “돈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방법”은 실패할 수 밖에 없으며 사회주의를 과학적 기초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물질적 요새’의 점령은 물론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체제의 ‘과학성’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척도로 측정하지 않고 집단주의와 수령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한 사상적 각성과 단결을 주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체제의 불패성과 우월성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주의 체제 토대의 취약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 開放의 필요성 및 부작용

1983년 6월 중국방문을 통하여 중국의 개혁·개방 상황을 견학하고 돌아온 김정일은 북한체제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김정일은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불균형으로 인해 초래된 만성적인 경공업 제품 및 생필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984년 2월 衣食住 문제해결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라는 소위 신경정체정책을 발표하고 제도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김정일은 “특히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일부 과학기술과 경제부문의 우세를 가지고 사회주의를 헐뜯고 있는 조건에서 과학기술과 경제건설 분야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언급한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국가들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북한의 경제가 萎縮됨으로서 남한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상대적인 경제발전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음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들어 선진과학기술 도입을 위한 합영과 합작사업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다.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됩니다. 과학기술은 인류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집대성한 귀중한 창조물이며 인류공동의 재부입니다. 세계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전반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울수 없습니다.⁴⁸⁾

김정일은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최신 과학기술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연구활동에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과학서적 교류와 인력교류 등의 방법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하며, 전자공업 등의 첨단기술분야는 합영과 합작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加速化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개혁·개방의 부작용에 대하여 더욱 우려하는 쪽으로 인식이 변화하였다. 1992년

48) 김정일, “과학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419.

1월에는 3대혁명중 기술혁명에 대해서도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마치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견해”라고 하면서 기존에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기술개발을 단시일 내에 성취하자고 했던 입장을 일축시키고 본래의 3대혁명 입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술도입을 포함한 개방정책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⁴⁹⁾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소폭의 개혁·개방정책이 초래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 명백히 인식하였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 속에서 계급적 각성이 무디어지고 생활상 교우가 더 높아진 반면에 혁명적 세력이 부족한 새세대들이 간부대열에 들어오면서 관료주의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사회주의 건설의 첫시기에 얼마 없었던 부정부패 현상까지 적지않게 나타나게 되었다.⁵⁰⁾

김정일은 동독, 루마니아 등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의 원인이 바로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부작용임을 뚜렷이 인식한 것이다. 즉 김정일은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원인을 관료주의의 팽배, 지도자의 지도력 부족, 지식인과 청소년들의 사상오염 등 세 가지로 결론짓고 사상통제와 단속을 강화하였다.⁵¹⁾ 김정일은 사회주의 체제 붕괴의 내적 원인에 대해 체제의 經濟的 非效率性 문제는 자신의 문건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방법은 개혁조치와 개방정책이 아

49)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92.1.3),” p. 452.

50)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92.10.10)”

51) 위의 글.

나라 사상강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體制固守 의식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인간개조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고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주체의 역할을 높여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됩니다.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는데서 이밖에 그 어떤 다른 묘술이 있을 수 없습니다.⁵²⁾

이렇듯 중앙집권적인 규율에 의하여 당의 유일적 지도를 따르고 당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들의 思想意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원주의'를 사상에서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로 규정하고 북한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多元主義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래서 1984년 개혁정책과 함께 1달에 한번으로 느슨하게 풀어 놓았던 학습활동과 생활총화를 1991년부터 다시 1주일 단위로 환원하는 한편, 개혁·개방정책의 부작용으로 사회문제가 된 암거래, 매춘 등 「비사회주의적 요소 타파를 위한 '그루빠」」를 조직하여 1991년 12월부터 1993년 말까지 부정부패 척결 등 사상무장을 강화하였다.

김일성 사후 미국과의 외교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김정은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개방문제를 “서방 자본주의 나라들의 원조와 협력에 기대를 걸면서

52)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92.1.3),” p. 428.

제국주의자들에게 아부 굴종”하고 있다는 식으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혁·개방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고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 바로 통제된 개방정책, 즉 나진-선봉지역 경제특구 구상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특구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만 經濟回生 政策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 南北 體制共存 지향

김정일은 경제침체의 요인으로 사회주의권 시장 붕괴와 국방력 강화 등을 들어 합리화함과 동시에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형을 통해 체제경쟁의 正當化를 시도하였다. 김정일은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1984.2.16)”를 발표한 1984년까지만 해도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적 우월성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자고 하였고,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자신감은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역력히 나타난다. 즉 “수령님께서는...인민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이고 당 제7차대회를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인민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이고 당 제7차대회를 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⁵³⁾라고 하였다. 제7차 당대회에 대해서 1983년 7월 김일성은 1986년 개최할 계획에 대해 언급한바 있다.⁵⁴⁾ 김정일이 이 문건을 발표한 시기는 1984년이기 때문에 인민생활 수준을 한 차원 높이려면 적어도 1990년을 겨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53)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pp. 6~7.

54) 김일성,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99.

직까지 당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으로 보아 경제성장과 인민 생활 향상이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인민생활 향상이 통일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이 김정일의 생각이다. 남북한의 대결을 정치군사적 대결인 동시에 경제대결로 규정하고 “경제적 면에서도 남조선을 압도하고 완전히 눌러 놓아야 한다”고 하였고, 물질생활면에서 남북한 사이를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체제경쟁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김정일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그들이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깊이 인식하고 이 고마운 제도를 목숨바쳐 지키겠다는 정치사상적 각오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김정일도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옷이나 집같은 것은 없어도 좀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고 하면서 먹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였다. 김일성의 교시를 원용하여 의식주 문제를 ‘식의주’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먹는 문제에 관한 한 최우선적 해결을 강조하였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추진하고 간석지 개간과 새땅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곡물생산을 증대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먹는문제’를 해결하는 김정일과 김일성의 공동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⁵⁵⁾ 김정일은 그의 교시에서 체제경쟁의不振

55) 김일성도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9기 시정연설에서 북한이 현재 “유족한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기본생활은 보장받고 있다”라며 경제효율성 보다는 社

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즉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아직 유족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서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⁵⁶⁾라고 밝힘으로써 기존의 유족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태도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이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정치군사전과 경제전⁵⁷⁾이 불가능해지자 체제의 정당성을 사회심리적 차원으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해 의식주 문제가 걱정없고 빈부의 격차가 없으며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의 혜택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실업자가 없고 알콜중독자나 마약중독자, 매춘 등 소위 ‘자본주의적 병폐’가 없다는 사실들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지적한다. 從屬理論이 주장한 내용중에 ‘분배의 평등’ 문제만이 사회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유효한 조건임을 감안하면 특별히 잘사는 사람도 못사는 사람도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의미도 된다. 이러한 태도변화는 김일성이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 시정연설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한 표현으로서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 북한의 경제적 침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회주의 體制 優越性에 대해 점차 심리적이고 정신

會的 優越性을 강조한 바 있다.

56)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92.1.3),” p. 451.

57) 김정일은 1984년 2월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에서 남북간의 경쟁을 ‘정치군사전인 동시에 경제전’이라고 하였다.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 p. 2.

적인 측면의 만족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당화의 시도는 흥미롭게도 북한의 역사적·사회적 경험속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제국주의 식민통치의 억압이라는 제3세계의 보편적 경험에 입각하여 경제성장보다는 사회적 평등의 가치에 호소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용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⁵⁸⁾

따라서 김정일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정치군사전과 경제전의 체제 경쟁이 부진한 상황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 등을 내세워 체제공존의 분위기를 유도하고 민족주의적 선전공세를 강화함으로써 통일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58) 金炳魯,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귀순자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북한의 사회주의가 남한의 자본주의 제도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북한사람은 약 30~40%로 많지 않지만 사회주의 제도를 완전고용·자립적 민족경제 등 소위 ‘사회적 우월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70%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IV. 金正日 政權의 變化展望

1. 政策展望

김정일의 정세인식과 북한의 사회 각 분야 현황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김정일 정권의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대내정책에서는 개혁은 최대한 억제하는 가운데 통제된 개방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對內 經濟改革을 억제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노선을 계속 견지할 것이며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강화한다는 정책슬로건을 사용할 것이다.⁵⁹⁾ 동시에 엘리트 구성에서도 기존의 노중청 배합원칙을 견지⁶⁰⁾함으로써 내적인 개혁정책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 경제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주·평화·친선(우호)의 공식 대외정책 이념을 강조할 것이다.

둘째, 김정일은 제국주의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고 군사부문을 체제유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경제난 심화에도 불구하고 제2경제인 軍經濟를 민수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1994년 8월 27일 김정일 로작(1974.8.2)발표 20주년기념 보고대회에서 계응태는 현 정세에 대해 “지금 우리혁명의 내외정세는 의연히 복잡하며 우리가 갈길은 멀고도 험난하다”라고 평가하였으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데서도 군사력의 강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9) 김일성 추도대회에서 김영남이 발표한 추도사 참조. 「조선중앙방송」, 1994.7.20.

60) 김정일 로작(74.8.2)발표 20주년기념 보고대회에서 발표(94.8.27)한 계응태의 보고. 「조선중앙방송」, 1994.8.27.

셋째, 대남정책에서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을 통한 통일달성 등을 闡明⁶¹⁾한 바와 같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할 것이며, 체제경쟁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는 심리전·사상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김정일 정권은 경제난 해소 및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왕에 추진해 오던 통제된 개방정책을 지속하고 대미·대일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이른바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 對內政策: 唯一體系의 지속과 經濟特區의 확대

김정일 唯一指導體系의 지속

북한체제는 수령론에 입각한 유일지도체제를 유지해 왔고 김정일을 수령으로 옹립하기 위한 우상화 및 제도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은 필연적으로 김정일 유일체제의 성격을 떨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수령은 최고녀수⁶²⁾로서 인민의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수령의 지위를 이양받는 것은 제도적 최고지위를 이양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국가주

61) 김일성 추도대회에서 김영남이 발표(1994.7.20)한 추도사. 「조선중앙방송」, 1994. 7. 20.

62) 북한에서 수령은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당과 혁명의 탁월한 영도자”이고 “근로 인민대중의 최고녀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9: 령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9.

석, 당총비서 등의 지위를 점유하지 않고 수령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수령의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최고지위 획득 또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며, 이러한 점에서 김정일은 국가주석과 당총비서직에 절차를 밟아 공식취임할 것이며 수령으로 추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령승계를 예상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앞에서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김정일이 1973년부터 20년 동안 수령승계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옴으로써 권력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당조직, 군부, 3대혁명소조 및 사로청 성원,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출신인사, 친인척들이 핵심부를 이루고 있어⁶³⁾ 당분간 정권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김정일 정권은 유일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主體思想의 '김정일주의화'를 시도하고 김정일에 대한 상징조작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김정일 우상화 작업을 가속화하는 한편, 김정일 측근의 충성과 및 친·인척을 중심으로 권력구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986년 5월 김일성의 후계승계에 대한 공식발언 이후, 1987년 11월 항일 '구호나무' 소개로 시작된 김정일 우상화 작업은 1988년 2월 김정일花 재배·보급, 정일봉(1988.11.15), 향도봉(1991.1), 만수무강수(1991.2.9) 등 상징조작과 신격화로 이어졌다. 북한은 또한 1988년에 기록영화 「위대한 전환의 한해

63) Pan Suk Kim, "Prospects for Change in the Power Structure in North Korea," *Korea Observer*, Vol. 42, No. 3, p. 306; 許文寧·鄭圭燮·全賢俊,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7), p. 4; 외교안보연구원, 「김정일체제의 등장과 정책방향 전망」(94.7.27), pp. 5~7.

1974」를 제작·상영하여 김정일이 1974년에 이미 후계자로 추대되었음을 공개하고 1991년 개정·출판한 「조선로동당력사」에서는 1979년판에 없던 「정치적 수령의 후계자 문제의 빛나는 해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 선포」라는 새로운 절을 삽입하여 수령승계의 정통성 창출을 시도하였다.⁶⁴⁾ 이미 과거의 행적을 재구성·선전함으로써 ‘문학예술의 천재’, ‘사상이론의 거장’, ‘창조와 건설의 영재’라는 이미지를 얻은 김정일에 대해 1990년대에는 ‘자주시대의 세련된 영도자’, ‘광폭정치가’, ‘인덕정치가’라는 이미지를 각색하였다.

김정일이 주석직을 이어받아 수령론에 입각한 유일체계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될 수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의 절대적인 支持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⁶⁵⁾ 과거역사의 ‘신화화’와 같은 방식으로는 수령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 즉 김정일의 카리스마 부족, 인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부진, 경제난 등으로 김정일유일체계의 持續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정일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일체제로의 변형도 상정해 볼 수 있다.⁶⁶⁾ 변형의 방법으로는 현재처럼 형식적으로는 김정일유일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개인숭배 캠페인을 최소화하고 김정일의 절대권력을 점차 약화시켜 나가는 방법⁶⁷⁾과 현재의 헌법틀 안에서 集團指導體制⁶⁸⁾로 이행하

64)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p. 469~76.
 65) 최근 귀순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김정일은 전체주민의 40~50%, 많게는 60~70%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金炳魯,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66) 이종석, 「한겨레신문」 1994.7.19.

는 방법 등이 예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측은 북한의 유일체계가 지닌 非민주성과 비효율성의 수정에 대한 당위론적인 평가라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현실적 입장에서 김정일 정권은 주석직을 포함한 제도적 수령승계는 물론 상징조작과 이상화 작업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經濟特區의 확대

북한은 무역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우선적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외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북한은 무역제일주의는 물론 당면한 경제목표로 내걸고 있는 경공업제일주의도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⁶⁹⁾ 북한은 특히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식민지배상 및 경제지원을 받아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67)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1994.7.30), p. 19.

68) 하와이 대학의 서대숙교수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의 바뎀트카첸코 부과장 등은 단기적 관점에서 집단지도체제의 등장을 예상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신동아 편집부, “해외전문가 종합진단: 김정일북한, 생존의 조건,” 「新東亞」 (1994.9), p. 215, 217.

69) 농업제일주의도 천명되어 농업부문의 개혁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은 농촌테제 30주년 기념에서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힘으로써 ‘자본주의적’ 개혁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示唆하였다. 현 상태에서 농업개혁은 고려되지 않고 있으나 ‘전인민적 소유’의 추진을 통해 식량생산이 증대되지 않고 농업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 작업반 및 분조단위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개혁정책은 향후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개발 및 확장을 위주로 한 전형적인 국토종합계획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당면한 북한의 경제난을 완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⁷⁰⁾ 따라서 새로운 경제특구의 추가설치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미 1993년 3월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125Km² 추가로 편입하여 총 746Km²로 확대한 바 있다.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경제회생을 시도한다면 장기계획과 더불어 보다 중·단기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가 필요하다. 새로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신의주, 남포 등을 꼽을 수 있다.⁷¹⁾ 남포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무역부는 대우그룹과 이미 1992년 2월 남포공업단지 개발에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 북한은 경공업분야(의류, 봉제완구, 신발, 가방, 장식품)에 대한 남한의 합작투자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도 있어 남포지역을 경공업 중심의 무역지대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의주는 중국과의 경제교류 및 임가공교역을 위해 무역지대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통제된 관광산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관광개발 사업은 소비주의와 같은 자본주의 사상이 침투함으로써 사회주의적 價値基盤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지만, 외화 획득의 지름길이며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을 개발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

70) 최근 1994년 8월 25일 나진·선봉지대에 자본금 1억루블 규모의 「조·쏘상업센터 주식회사」가 첫 합영기업으로 창설되었다. 여기에는 러시아 이외에 미국·스위스·오스트리아의 자본도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內外通信」, 1994.8.26.

71) 崔壽永,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 방안,” 民族統一研究院, 「統一研究論叢」, 제3권 1호 (1994), p. 84.

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개혁·개방의 초기 중국이나 사회주의 경제개발에 완전히 실패한 탄자니아(Tanzania)⁷²⁾의 경우도 관광사업을 추진하여 외화를 획득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북한은 금강산 일대를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외화획득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 지역은 남한의 설악산과 연계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할 때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이미 홍콩의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금강산관광개발과 관련한 기본적인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⁷³⁾

나. 對外政策: 北·美, 北·日 국교정상화

北美 외교대표부 개설 및 수교

북미관계는 북한과 미국간의 고위급 3단계회담에서 발표된 「합의문」을 기초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은 고위급 3단계 1차회담과 후속 전문가회담 및 3단계 2차회담을 통하여 외교대표부 설치, 경수로 선정 및 지원, 폐연료봉 처리문제, 원자로 가동중단 및 대

72) James H. Weaver and Alexander Kronemer, "Tanzanian and African Socialism," *World Development*, Vol. 9, No. 9, 10(1981), p. 847. 탄자니아는 사회주의의 '폐쇄성' 자체를 최대한 이용하여 킬리만자로(Kilimanjaro)산을 관광지로 이용하여 외화획득을 시도하였다.

73) 崔壽永,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 방안," pp. 84~85. 홍콩의 Raine Horne & Lau社는 북한의 금강산국제그룹으로부터 금강산관광개발을 위한 조사를 의뢰받아 금강산관광개발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of Kungangsan Tourist Development) 결과보고서를 1992년 5월 북한에 제출하였다.

체에너지 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절차에 합의함으로써 合意移行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먼저, 외교대표부 개설문제는 5MW에서 추출한 8천개의 폐연료봉 처리문제가 합의되고 북한이 연료봉의 재장착 중단 등 核凍結을 지속하고 있다는 미국의 판단이 서는 대로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95년 6월로 更新되는 NPT체제에 북한을 잔류시키기 위해 외교대표부의 개설을 금년안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대표부는 연락사무소 수준일 것이며,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서는,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의 단계적 조치⁷⁴⁾를 고려해 볼 때, 대북 경제제재 조치와 대북 禁輸措置의 부분 또는 전면해제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미국은 조만간 대외원조, 외환, 통신 등 3개분야에서 제1단계 제재완화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⁵⁾ 지난번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무역규제 완화조치와 제1단계 조치의 실행은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대북 금수조치가 완화되고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나면 북한과 미국은 북한의 NPT잔류 및 핵안전협정 이행문제, 그리고 경수로 지원 및 대체에너지 제공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협상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배제를 요구하고 있는 바, 대미수교를 위한 협상의 발판으로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미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議題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정전위원

74) 朴鍾喆, “북·미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民族統一研究院, 「統一研究論叢」, 제3권 1호 (1994), pp. 106~08.

75) 「朝鮮日報」, 1994.11.17.

회로부터 대표를 일단 소환함으로써 북미간 평화협정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북한 핵위협철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화협정 및 수교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경수로 건설 지원을 위해 북한을 적성교역국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 바, 수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은 ‘일괄타결’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바, 강석주는 기자회견을 통해 흑연감속로를 동결시키는 대신 “경수로를 받고 보상도 받자는 것”이라며 “미국이 명백하고 확고한 경수로 제공을 담보하고 우리가 경수로를 받을 때까지 흑연로동결에 대한 실천적인 보상조치를 취하는데 따라 우리도 동결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나가자는 것”⁷⁶⁾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대체에너지가 제공되는데 따라 흑연로건설중단을 이행할 것이며, 경수로 지원 정도에 따라 방사화학실험실 봉인과 핵안전협정 및 한반도비핵화를 이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천 MW급 경수로 건설은 향후 10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북한의 조치가 지연 또는 불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남한정부와의 공식대화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할 때 남북간에 직접 협상없이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도 있으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국가가 다양해질 경우, 경수로 건설 지원과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이 ‘일괄타결’ 되지 않음으로써 문제해결의 복잡성도 커질 것이다.

핵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개선의 주도권을 행사해 온 미국은 국내정치와 외교분야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서두를 것

76) 「조선중앙방송」 1994.8.13.

으로 보여 관계개선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3단계회담에서 특별사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북미관계개선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음을 예고하는 단서로 볼 수도 있다.

北日 무역대표부 개설 및 수교

1994년 6월 29일 출범한 사회당출신의 무라야마내각은 북일수교에 대해 더욱 적극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⁷⁷⁾ 야마시타 신타로 신임 주한일본대사는 1994년 8월 10일 북한이 核疑惑을 과거분까지 불식하지 않는 한 일본-북한간 수교는 안되겠지만 “핵의혹 해소가 양국간 수교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며 북한과 수교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의혹 해소를 유도하는 역할쪽으로 갈 것임을 밝혔으며⁷⁸⁾, 8월 23~25일 북경에서 북·일관리들간의 접촉을 통해 양국간 국교수립을 위한 교섭재개 의사를 타진하였다.

사실, 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1990년 3당(북한의 노동당·자민당·사회당) 공동선언으로 시작되었으나 미국의 동북아 패권주의에 의해 제동이 걸린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북미간 핵문제 해결 이후 이제 오히려

77) 일본은 1993년 7월 친북성향의 사회당을 포함한 신보수 연합정권이 등장함으로써 기존 자민당정권보다 대북수교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8월 30일 북한과의 수교협상은 핵문제나 향후 북미협상 및 남북관계의 진전에 관계없이 주체적으로 재개할 것이라고 하였다. 호소카와 내각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일본의 전쟁책임을 매듭짓는다는 차원에서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78) 「東亞日報」, 1994.8.11.

일본이 대미압력을 가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일본은 2차례의 북미회담이 발표되자마자 미국의 獨走를 의식하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북일수교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1994년 2월 3단계 북미회담의 추진이 구체화되자 미국으로 하여금 핵문제를 보다 철저히, 강력하게 다루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북미3단계 1차회담의 공동성명에 대해 북한의 성실한 이행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대미압력행사와 북일수교를 통해 북한에 支持基盤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찰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이 실질적인 특별사찰을 거론하자 일본은 특별사찰에 대해서는 고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한국형 경수로 선정을 찬성함으로써 미국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과 일본은 경쟁적으로, 그리고 상호보완적으로 대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일본은 미국의 정책방향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쪽으로 잡혔다고 보고 대북 관계개선의 속도를 빨리하고 있으며, 미국으로서는 북일관계개선의 움직임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국내정치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이용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1972년 2월 미국과 상해커뮤니케를 발표함으로써 1969년부터 추진해온 양국관계개선을 공식선언하자, 일본은 곧이어 그해 9월 중국과의 「공동성명」을 통하여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빠르게 증진시킨 사례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⁷⁹⁾ 따라서 북미간에 연락사무소 개설

79) 그후 미국은 1973년 2월 키신저의 중국방문에서 양국수도에 '연락사무소' 개

이 可視化되는 시점에서 일본은 북한과 무역대표부 개설과 같은 관계개선을 곧바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위해 필요한 措置로 인식하고 있어 북한의 대미·대일관계개선의 전망이 더욱 밝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는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는 냉전을 종식시키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경수로 지원시 러시아모델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북한내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의 기본입장도 한반도 非核化 및 평화·안정유지를 위해 북미회담의 성과를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한 경수로 지원 및 양국수도에 외교대표부를 설치키로 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미·북일관계개선을 원칙적으로 지원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대북영향력의 증대에 대해서는 경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북미 외교대표부 및 북일 무역대표부 개설은 경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核透明性의 보장을 통한 관계증진을 바탕으로 양국간의 수교도 각각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설을 합의하였으며 1979년 12월에 양국의 외교관계가 공식으로 수립되었다.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함에 따라 대만과의 안보조약을 파기하였고 1천명에 달하는 군사고문단 철수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만의 무기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다. 프랑스와 주아이요著, 李昌訓 역, 「중국의 대외정책」(서울: 탐구당, 1989), pp. 114~15. 일본은 중국과 해저케이블설치 합의(1973.5), 항공협정(1974.4), 해상협정(1974.11), 어업협정(1975.8) 및 무역관계의 증진을 통해 1978년 8월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다. 對南政策: 經協擴大 및 形式的 南北對話 재개

북한은 현재 핵문제 해결과 관련, 경수로 지원과 대체에너지 제공 등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단기적으로 볼 때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북한은 北美核協商 과정에서 남한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견지해 왔는 바, 김정일 정권이 남한을 소외시킨 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정치·경제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는 한, 북한이 남북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는 데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미국과 오랜 협상끝에 包括的 合意를 도출해 낸 북한은 금번 제네바합의를 통해 자신의 외교적 성과에 상당한 만족과 자신감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신감은 한편으로는 남한의 적극개입을 遮斷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지도부의 판단을 수반하게 될 것인 바, 향후 북한은 한미공조 와해를 정책의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정치적 평화공세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도 김정일 정권의 내부통합과 국제사회의 公認, 남한의 체제인정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북한으로서는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북미 국교정상화에 두어져 있고 일본의 경제원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 기성사에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994년 7월 14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의 조문단 파견을 환영한다는 담화 발표 이후 대남비난공세를 露骨化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지

일 내에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미합의사항이 이행되고 남북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며 북한의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논의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미·대일 경제지원 및 수교를 위해 남북정상회담 재추진 등 대남접촉을 재개해야 되는 바, 외형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표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문제 해결구도가 마련됨에 따라 核·經協連繫政策의 단계적 완화조치에 의해 기업인의 방북, 기술진 파견, 북한내 기업사무소 설치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정부와의 공식 창구를 통한 경협논의를 회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對北投資를 위해 필요한 투자보장, 청산계정, 분쟁해결 절차 등에 관한 남북당국간 공식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북미합의문을 토대로 남북한간에 한반도 非核化共同宣言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남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사찰과 한반도비핵지대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남한은 핵통제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남북상호사찰 대신 기존의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대상인 남북한 핵시설에 대한 교환방문 및 성역없는 특별사찰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남북신뢰구축과 핵의 평화적 이용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은 북미협상과정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남한에 國家保安法

폐지의 압력을 가하도록 유도할 것이 예상되며, 미국 또한 이를 남한의 대미 압력차단 카드로 이용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폐 등을 포함한 정치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동시에 북한은 미국과의 쌍무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核雨傘 철폐,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남북대화 재개의 장애라고 거론해 왔던 몇몇 사안들을 집요하게 들먹이면서 남북대화 단절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선전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미 지난 북미회담의 진행과정에서 남한에 대한 국가보안법 改廢問題와 민주화 및 인권문제 등을 거론한 것처럼,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더욱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북한은 체제경쟁에서의 劣勢를 만회하기 위해 남북간의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체제공존의 분위기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대남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정일은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남한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남북교류가 폐쇄적인 북한체제를 위협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교류 및 실천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다. 대신 「3대혁명전략」을 기본으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그리고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고려연방제통일을 공세적으로 선전⁸⁰⁾함으로써 체제공존을 위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남한체제의 내부혼란을 한층 조장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80) 「조선중앙방송」, 1994.7.10.

요컨대, 김정일 정권은 미·일 등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그리고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체제공존의 분위기 유도 및 민족주의적 감정고취를 목적으로 대남접촉을 시도할 것이 예상되나 단기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정책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 金正日 政策의 評價와 時期別 政權變化의 展望

가. 短期的 展望

김정일 정권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김일성 정권을 장기적으로 유지했던 기초가 얼마만큼 지속될 것이며 김일성 정권의 脆弱點이 얼마만큼 극복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모순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權力維持 方式은 김일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권력유지의 기반도 단기간내에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일 정권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계속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 외부의 자유화 바람의 침습을 막기 위하여 외부정보의 遮斷과 단절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일 개인숭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권력의 원형이 스탈린이었으며 스탈린보다 훨씬 더 神格化된 형식의 우상숭배를 발전시켰다. 이것은 김정일 시대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위의 두가지 특성이 권력유지를 위한 기본적 요구(imperative)이기 때문에 폐기하기를 기대

하기는 어렵다. 셋째,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김정일식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분단상황은 지금까지도 강력한 정치적 통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으로 적극 활용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넷째,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이 가져온 부작용을 지적함으로써 체제결속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북한 지도층이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중요한 교훈은 개혁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더욱이 개혁을 시도한 지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체제변화를 경험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혼란의 상황에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일 정권은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을 기존질서에 통합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정권유지 방식을 거의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또한 金正日이 承繼 준비 차원에서 공고화해 온 통제체제가 당분간은 지탱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蘇聯과 東歐 社會主義 崩壞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한 결과 북한주민의 다수는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면 모두 망하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社會主義體制를 고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모두 중간간부의 利己主義, 不正腐敗의 탓으로 인식하고 있고 金正日은 지도와 통치를 잘 하는 능력있는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저항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다. 북한주민의 대다수는 암시장을 통한 장사 등의 방법으로 資本主義的 生活을 추구하지만 그 역시 경제적 실용주의이지 체제저항적인 성격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金正日에 대한 불평과 저

항은 매우 가혹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組織的인 抵抗勢力의 발달이 매우 미약한 형편이다.

북한 권력엘리트의 특성으로 볼 때 단기간내에 노선갈등이나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을 중심으로 유일체제가 확립되어 있어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은 構造的으로 凝集되어 있기 때문에 파벌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김일성이 부자세습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20여 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黨·政·軍 모든 부문에 혁명가문출신과 충성심이 높은 엘리트들을 대거 登用하고 폭력기구를 통해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일체의 갈등을 배제하는 강압정치를 실시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일 정권은 기존의 '통제된 개방정책'을 확대하고 대미·대일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이른바 '實用主義的 開放政策'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제적 고립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핵문제 해결에 관한 「북·미 기본합의문」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이미 실용주의적 정책노선의 윤곽을 드러냈다. 북미간 기본합의문이 성사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탈냉전 시대에 걸맞게 북한을 東北亞 秩序에 편입시키고자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북한의 실용주의적 정책변화가 뒤따랐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은 중·러의 對韓修交 등 주변정세의 변화속에서 대미·대일 관계개선이 북한의 경제난 회복과 군사적 고립타개에 기여함으로써 체제유지 및 정권안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대

미·대일관계정상화에 死活을 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조만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게 될 터인데 이는 국제적으로 고립으로 정권안정에 어려움을 느꼈던 김정일에게 국제적 위신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국민들에게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대외관계의 변화가 단기적으로 '외부의 바람'을 유입하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은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에 대한 대가로 1994년 말까지 5만톤을 시작으로 매년 50만톤 상당의 중유를 북한에 공급하겠다고 합의하였고 이미 약속한 대로 3개월 이내에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를 완화할 예정에 있다. 북한의 核建設 凍結과 이에 대한 미국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북미 기본합의문」은 1994년 11월 4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추인을 받음으로써 김정일 정권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 역시 나진·선봉 지역내 임가공 및 광산개발, 사회간접자본 개발 등의 경제진출을 위해 수교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수로건설 지원과 대체에너지 제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일본과의 修交協商이 추진될 경우 50억 달러 정도의 賠償金이 북한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經濟難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정부의 한국기업 대북진출 허용으로 북한경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이같은 대북경제지원은 피폐된 북한경제에 적지 않은 활력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김정일 정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中·長期的 展望

중·장기적으로 볼 때, 김정일 정권의 운명은 經濟回生 政策의 성공 여부, 경제회생을 위하여 취할 부분적인 개방이 가져올 自由化의 바람, 經濟回生の 속도와 방법을 둘러싼 지도층간의 路線 葛藤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서 경제 효율성이 희생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 정권안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의 통제와 폐쇄정책이 경제회생에 부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구상하고 있는 개혁과 개방 정책은 매우 制限的인 것이며 경제효율성 개선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나진~선봉지구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겠지만 社會間接資本(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未備로 인해 공장가동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외국기업의 진출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은 상당한 體制的 威脅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은 정권유지를 위한 우상숭배 및 폐쇄주의의 전략, 분단체제의 한계, 개혁 개방한 사회주의권이 보여준 혼란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體制改革을 동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체제개혁을 수반하지 않는 限定된 地域의 開放政策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개방정책이 국내기업에 생산 및 경제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波及效果를 미치지 못한다면 유치된 외국기업의 생산력이나 외화가득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과 인민들의 근로의욕 상실때문에 경제쇠퇴가 가중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改革이 없이 나진~선봉 등 制限된 地域에 外部 資本을 도입하여 경제를 치유하겠다는 金正日의 구상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북한사회가 개방되느냐 아니냐는 이제 지도부의 政策的 意志만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의 지도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變數들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朝·中國경을 통해 인적 왕래, 상품 및 정보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 이후 외부 정보와 자유화 바람의 유입은 본격화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가 회복이 안되거나 회복의 속도가 느릴 경우 경제적 실용주의를 추구하던 주민들이 체제저항으로 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가치의식이 변화한 것은 외부로부터 스며들어온 바람의 영향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生計獲得의 自救策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몸으로 익힌 체험적 가치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주민의 사회의식은 1980년대 후반 들어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하게 되자 부족한 生必需品確保를 국가에서 기대하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독자적으로 책임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크게 달라졌다. 즉 암시장 및 지하경제의 선호, 화폐에 대한 가치 변화, 개인소유주의, 그리고 뇌물의 성행, 절취(pilfering)의 일상화 등 個人主義와 物質主義가 擴散되었다. 이전에는 북한 주민의 支配的 價値는 정치적으로 인정받아 公的 部門에서 출세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와 일탈행위의 확산은 단순히 사회적 병리현상이 아니라 構造的인 社會變動의 指標이다. 북한에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이 국가의 공식 분배통로를 통하여 인민들에게 공급되지 않고 暗市場으로 흘러나가는 등 이미 유통구조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태동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에서는 자본주의적 제도를 도입하는 체제개혁을 기피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미 體制改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암시장에서 이루어지는 經濟行爲를 선호하고 개인주의에 탐닉하는 사람들은 전체인구의 60%에 가까우며 약 40%의 주민들만이 체제에 통합하여 기존체제를 지탱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金正日 정권은 情報遮斷, 閉鎖主義가 지속되는 한에서만 유지되기 때문에 개방을 하여 外部의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매우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의 결과, 북미·북일 관계정상화가 실현되면 체제결속을 위한 假想的 敵이 사라짐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 기반은 이전보다 약화될 것이다. 북미관계의 정상화로 군사부문의 위기가 사라지면 군경제의 민수화 논의 및 대남협상을 통한 군축논의 등 「경제~국방병진노선」 지속에 큰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하여 김정일 정권은 대내적으로 남북대결과 남북간의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킴으로써 개혁요구의 목소리를 잠재우고자 시도할 것이나 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서 개혁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향후 3~4년 동안 경제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金正日은 경쟁자에게 政權挑戰의 名分을 주게 될 것이다. 적극적 개혁·개

방이 요구되는 북한의 構造的 要求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金正日은 보다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요구하는 세력들에 의하여 도전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의 정권유지의 논리와 김일성에 대한 입장때문에 김정일의 한계가 명백히 북한체제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북한지도부에 만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경제희생의 희망이 없는 폐쇄주의 경제체제 유지여부를 둘러싸고 엘리트들간에 分裂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향후 3~4년 동안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엘리트간의 內紛은 발생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지원으로 최소한의 체제 유지 기반을 갖추게 될 경우,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는 더욱 높아져 농업·경공업·상업 등 대내경제분야의 과감한 개혁의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보더라도 그 원인이 경제침체라기보다는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정치적 자유와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한 갈망의 결과였음을 생각할 때, 북한의 경제적 성과는 더 높은 물질생활의 享有를 위해 합리적인 경제개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혁정책의 선택을 두고 엘리트간의 분열 및 김정일 유일지도체계에 대한 비판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혁·개방정책을 둘러싸고 노선 갈등과 엘리트간의 충돌 및 분열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엘리트들간에 분열이 일어나면 남북분단 상황을 고려하여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軍部가 介入할 가능성은 한층 커진다. 즉, 金正日 政權의 失脚은 밑으로부터의 조직적인 저항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위로부터의 군부쿠데타 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에서 金正日 정권붕괴는 政權交替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정권붕괴가 북한 사회주의 체제붕괴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남한과 경쟁하고 있으며 동독의 吸收統合이 동독의 기득권층에 가져다준 파멸의 교훈 때문에 북한의 엘리트층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기를 선호할 것이다. 南韓에 흡수될 경우 300만에 가까운 기득권층의 이익이 일시에 박탈당하게 될 것임으로 單獨體制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金正日 이후의 새 정권은 보다 근본적인 경제회생을 위하여 金日成과 金正日의 政治優先主義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改革·開放과 현실적인 南北關係 改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V. 結 論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남한이 취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통일문제는 이제 한반도 주변 4국중 어느 한 두 국가의 입김에 좌우될 수 없는 多次元的인 관계로 진입하였으며, 남북한이 민족공존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에 개혁정부가 들어서도록 하는 방법은 북한이 미국과 일본 등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정치·경제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參與化政策(engagement policy)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정권에 대해 봉쇄정책을 취해도 그것이 정권의 불안정과 붕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결속을 촉진함으로써 대결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만약 봉쇄정책의 결과로 김정일 정권이 붕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로 귀결되기보다는 북한의 內亂 및 주변 4국의 대북개입에 따른 분단의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참여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이 지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세계의 무대로 끌어내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적 선택을 하도록 誘導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사회주의체제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북한에 개혁주의적 사회주의 정권의 등장을 유도하는 참여화 정책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參與化 政策은 김영삼 정부가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고 있는 '세계화'의 전략적 구도속에서 심도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주변국 모두의 공통된 정책목표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남한은 이같은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분단상황의 固着化로 이어지지 않고, 남북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의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외교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남한이 상정하는 통일과정과 통일정책을 지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통일의교 노력이 요구된다.

남한은 북한의 상황과 국제환경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되, 상황변화에 대한 事後的·受動的 對應이 아니라 남한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대남 정책 및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하에 장기적 참여구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 정책방향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태를 최대한 방지하고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통해서 남북공존과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對北包容政策과 대주변국 협조체제 구축이 요청된다. 결국 참여화 정책은 북한에 새로운 개혁정권을 출범시킴으로써 남북연합과 민족의 통일을 촉진시킬 것이다.

참여화의 대북정책 수립에서 고려해야 될 네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 첫째는 북한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긴장이 지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대북정책 방향은 和解의 제스처를 계속하여 보내는 것이다. 敵對的인 대북정책보다는 온건한 접근이 북한이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전략이다. 지금까지 核問題를 둘러싼 남북간의 긴장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협상을 계속할 수 있었고, 대남비방을 계속하면서 체제내부를 단속할 수 있었

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난 2년간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북한체제를 위기에서 구해주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둘째는 남북관계는 절대로 북한당국 單獨意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측과 주변 강국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에 지나치게 신경쓰기보다는 우리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확정하여 적극적이고 일관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은 힘이 약한 제3세계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시작으로 西方世界에 참여하는 만큼 지금까지와 같은 독불장군식의 외교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미국, 일본 및 중국과 협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경수로 지원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 북미합의문 가운데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함”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남북대화 재개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통일은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통일은 20~30년의 기간을 요하는 과제이다.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당장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인 판단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市民社會가 발달하고 저항세력이 발달하여 체제변화가 올 수도 있겠으나 그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당장의 통일보다는 통일기반 조성이 현안문제인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이 당장 붕괴할 것이라는 가능성없는 가정에 기초한 통일정책보다는 북한을 점차 변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주민들의 변화하는 의식을 더욱 촉진시키는 방

향으로 정책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의 내용은 反體制的 抵抗意識이라기보다는 물질주의적 실용주의에 더 가깝다. 남북간에 교류가 활발해지고 외부의 정보가 많이 유입될수록 북한주민의 의식은 경제적 실용주의에서 정치적 저항주의로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단기전략보다는 장기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는 대북정책의 방향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는 쪽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핵심군중과 기본군중, 복잡군중으로 구분되어 있는 북한주민 중 특히 복잡군중은 개인주의,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정치적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장사하여 돈벌기를 선호한다. 해외 유경험자 및 유학생 등 기본군중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도 문건에 “유학생출신”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당국의 심한 監視를 받으며 체제비판적인 인사들이 많다. 이처럼 북한사회는 복잡한 성분을 지닌 군중의 비율이 1989년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통일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복잡한 군중의 비율을 확대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교류를 증대시켜야 한다. 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은 경제협력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朝中국경을 통한 인적왕래, 상품 및 정보의 유입이 급증하였고 그것이 북한주민들의 의식구조 및 주민생활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 따라서 남북간에 경제교류, 인적교류가 활발해진다면 그것이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에 미칠 영향은 대단히 클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결코 호응하기 힘들겠지만 우리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제의를 해야하며 그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유화분위기를 지속하

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북간의 화해국면이다. 따라서 화해 제스처와 평화공세가 가장 효과적인 대북전략이다.

빈 면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 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화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
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北韓 官僚腐敗 研究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の 權力基盤 研究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和 選舉制度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을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展開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 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북한 對南 동향 분석(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日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1994.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일 WORKSHOP :

KOREAN PENINSULA DEVELOPMENTS AND U.S.-JAPAN-
SOUTH KOREA RELATIONS (vol. 1)

KOREAN PENINSULA ISSUES AND U.S.-JAPAN-SOUTH
KOREA RELATIONS (vol. 2)

KOREAN PENINSULA TRENDS AND U.S.-JAPAN-SOUTH
KOREA RELATIONS (vol. 3)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統一情勢分析 94-19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12月 日

發行日 1994年 12月 日
